

세계지방자치동향



지방행정

- (한국) 지방의회 의정비 개선 및 겸직제도 강화
- (일본) 일본 지자체의 이주지원정책

지역발전

-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City of San Francisco) “피트 스톱(Pit Stop)”
- 사회 취약계층 환경 개선을 위한 24시간 원스톱 공공위생시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지방의회 의정비 개선 및 겸직제도 강화

지방의회 의정비의 적정수준 추정을 위한 타당한 근거 필요

-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단체장 및 국회의원들의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지방의원들의 급여체계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안 필요
 - 지방의원의 경우 원칙적 겸직 허용을 하고 있으나, 겸직금지 범위에 대한 논란 존재
 - ※ 국회의원의 경우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금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자체별로 편차가 존재하며 의정비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등 급여체계 개선 필요
 - 지방의원 겸직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필요

일본의 지방의회 의정비

- 일본의 지방의원은 겸직과 겸업금지 규정을 두고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여 근무 일수와는 관계 없이 정액의 보수를 받는 「유급직의 신분」이 보장되고 있음
 - 일본 지방자치법 제92조는 중의원, 참의원, 보통지방공공단체의회의 의원,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상근 직원과 그 밖에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하는 단시간 근무직원에 대해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92조의2는 ‘보통지방공공단체의회의 의원은 해당 보통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청부(請負)자 및 그 지배인, 또는 주인으로서 동일 행위를 하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대표이사, 집행역 또는 감사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지배인 및 정산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의원의 겸업 또한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03조 제1항은 ‘보통지방공공단체는 그 의회 의원에 대해 의원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이 지방의회의원의 보수지급 근거가 됨
 - 지방의회의원은 비상근 직원에 대한 급부, 즉 생활급이 아닌 근무량의 반대급부, 임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보수’가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함

의정비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 지방의회 의정비 및 겸직제도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정비 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초지방의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또는 심의회 위원 대비 의정비 수준의 적절성에 대하여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고, 직무상 대면하는 공무원 직급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심의회 위원은 계장급 보수 수준이, 의회 의원은 과장급 또는 국장급 보수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광역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지방공무원 또는 심의회 위원 대비 의정비 수준의 적절성에 대하여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적절한 광역의원의 의정비 수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심의회 위원은 계장급 보수 수준이, 의회 의원은 과장급과 국장급 보수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기초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을 전제로 기초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심의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모두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나, 의회 의원 가운데 겸직하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광역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을 전제로 광역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및 심의회 위원, 비 겸직 의회위원의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겸직 의회위원의 경우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 지방의원의 겸직을 전제로 한 기초 지방의원의 적정한 의정비 수준에 대해서 응답자 가운데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한 반면, 심의회 위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정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방의원의 겸직을 전제로 한 광역 지방의원의 적정한 의정비 수준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및 심의회 위원의 경우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한 반면,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정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의정비 가운데 지방의원이 평균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내역은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활동 비용 및 교통비로 조사된바, 향후 의정비 조정을 위해서는 해당 부문에 대한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재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비로 의정활동에 충당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의정활동비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70% 이하로 충당한다는 응답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정비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의정활동비 현실화

- 현재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수년 동안 인상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므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실비 성격임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의정활동비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의정활동비 구성항목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을 고려해야 함
- 다만 의정활동비 지출의 투명성 및 타당성 제고를 위해 각 비목별 증빙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임

정책활동지원비 신설

-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정책개발과 조례제개정을 위한 정책활동 지원비를 신설하여 의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공모방식으로 신청하게 하여 이를 외부 심사 위원들로 구성된 “(가칭) 정책활동지원금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게 하고 지출내역은 회계 증빙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 분담

- 단체장과 지방공무원의 경우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보수를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원에 대해서만 자기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겸직금지제도의 개선

- 원칙적 겸직금지제도의 도입 검토
 -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일반 공직자에 비해 영리행위와 겸직이 자유로운 편인데 고위공무원 수준으로의 의정비 현실화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대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량과 업무일수를 고려했을 때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겸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지방의원이 직무수행에 전념하고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본연의 활동인 입법기능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함
- 설사 공익을 위한 차원에서 겸직을 허용하더라도 비영리단체의 홍보대사와 같은 업무에 한정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를 받는 겸직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겸직신고 및 제재 강화
 - 지방행정의 투명성 및 반부패 문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취임 외에 모든 영리행위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외의 영리행위도 사전에 의장 또는 상급기관에 서면신고하고 신고내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겸직내용의 공개 및 위반 시의 제재 수단 등도 미흡한 편이므로 겸직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영리행위가 위법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엄격한 징계규정을 마련할 필요도 있음(라영재, 2010)
 - 이를 위해 징계 종류를 세분화하고 겸직신고 및 겸직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의무 규정 마련, 지원 경비의 환수, 지방의정 성과 공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 연구위원)

일본 지자체의 이주지원정책

개요

- 일본 인구는 2008년 이후 계속 감소, 도쿄권(도쿄도, 사이타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을 제외하고 지방도시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 도쿄일극집중으로 인해 지방도시가 빠른 속도로 소멸되고 있음. 특히,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
- 일본의 인구이동 요인과 시대적 배경을 고찰함과 동시에 이주지원정책의 변천을 살펴보고 한 국에 대한 의미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인구이동의 요인

- 경로의존성 이론: 1945년 이후 일본정부가 도입한 산업집적정책의 관성에 의해 산업집적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노동력을 흡수하는 힘이 작용하여 도쿄도권, 나고야권, 오사카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에 인구집중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는 이론
- Pull-Push이론: 2000년 이후 일본에서 일어난 지방도시에서 도쿄로의 인구이동은 지역경제의 붕괴로 인한 Push형 인구이동이라고 볼 수 있음
- 라이프스타일 이주(Lifestyle Migration): 기존의 이론과는 달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한 인구이동. 1990년대 이후 젊은층의 지방도시로의 이주 및 이주희망자는 라이프스타일 이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주촉진정책의 변천과 시대 배경 (多田, 2016)

- 1960~1980년대 전반: 토지계획에 의한 지역 거점형성 및 지방의 산업입지정책이 이주촉진정책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주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없었음. 일부이긴 하지만 라이프스타일 이주를 실현한 인구이동도 있었음
-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리조트 개발이 지방으로의 인구이동을 촉진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주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없었음

- 1990년대 중반~2019년: 중앙 및 지방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주촉진정책을 도입한 시기
 - 1990년대 및 2000년대 전반은 무역자유화(1995년 WTO)에 의한 농업진흥책의 실시, 버블 경제의 붕괴로 인한 고용시장의 변화(비정규직 사원의 증가), 정년퇴직자의 귀농 등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이주촉진정책이 도입됨
 - 2008년부터는 중앙정부에 의해 구체적인 이주촉진정책을 실시. 특히, 세계적인 경제불황에 의한 실업자의 증가 때문에 젊은층의 지방으로의 이주촉진정책을 도입. 지역활성화 협력대(地域おこし協力隊), 시골에서 일하는 모임(田舎で働き隊) 등이 대표적임
 - 2014년 이후: 지방창생정책 도입,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법 제정(2014년 11월) 및 본부(2014년 12월) 설치.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이주촉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지방으로의 이주인구는 증가하였음
- 2020년 이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증가가 도심부에서 교외 및 지방도시로의 이주를 촉진. 또한, 2021년 9월에 디지털청이 설립되면 재택근무를 어렵게 하는 결재서류에 대한 도장문화, 대면회의의 감소, 문서의 디지털화 등이 추진되어 재택근무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지방으로의 이주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중앙정부의 이주지원촉진정책

-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제정: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및 지방도시의 과소화, 대도시의 과밀화를 지역활성화와 연계하여 해결하는 것이 목적
- 지방창생종합전략은 5개년 종합계획으로서 4개의 추진 목표
 - ① 지방에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
 - ② 지방으로의 이주 유도
 - ③ 젊은세대의 결혼·출산·육아 권장
 - ④ 안전한 생활 보장을 통한 지역생활권의 확대

| 표 1 | 주요 지원시책 및 프로그램

분류	제도 및 시책명	개요
이주 정주	지역활성화 협력대 (地域おこし協力隊、総務省)	도시지역에서 소외지역으로 이주한(주민등록지 이전) 사람을 협력대의 일원으로 인정하여 지역협력활동을 하면서 지역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지방창생 인턴쉽사업 (地方創生インターンシップ事業、内閣府)	동경권에 있는 대학의 지방출신 학생들이 출신지역의 기업에서 인턴쉽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책. 대학 졸업후 지방출신의 인재들의 귀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분류	제도 및 시책명	개요
교류	지역활성화 기업인 (地域おこし企業人、総務省)	지자체가 대도시권에 있는 민간기업의 사원을 일정기간 받아들여 지역의 매력 및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프로그램
	고향 워킹홀리데이 (ふるさとワーキングホリデー、総務省)	도시부의 대학생이 지방도시에서 일정기간 일하면서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국내판 워킹홀리데이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프로젝트 (子ども農山漁村交流プロジェクト、総務省、農水省、文科省、環境省)	농산어촌 지역에서의 숙박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활성화가 목적
	농산어촌진흥 교부금 (農山漁村振興交付金、農水省)	농산어촌 지역에서의 숙박을 늘려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한 시책에 대한 지원
정보 제공	이주·교류정보가든 (移住・交流情報ガーデン、総務省)	이주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지원의 창구를 개설
	지방인재환류촉진사업 (地方人材還流促進事業、厚労省)	대도시권 출신 젊은층의 지방취직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출처: 国土交通省(2021)을 참고로 필자 작성

지자체의 이주지원정책: 시마네현 고우츠시(島根県江津市) 사례

- 일: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Go-Con)를 개최, 지역자원의 활용 및 지역과제의 해결에 연계되는 플랜을 모집. 또한 일자리를 소개
- 주택: 빈집은행을 통해 주택소개 및 주택개조보조금 교부
- 각종 체험 및 교류사업에 대한 조성금 등

현황 및 시사점

- 청장년층의 지방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일본의 UIJ턴 지원정책: 지방출신이 대도시에서 공부하거나 취업했다가 다시 출신지역으로 회귀하는 U턴, 도쿄 등 대도시 인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I턴, 지방출신이 대도시에서 공부하거나 취업했다가 출신지역의 인근 도시로 회귀하는 J턴으로 구분
-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활성화 협력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행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지방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있음
- 관계인구 개념의 도입: 특정 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인구를 의미하며 잠재적으로 이주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과의 교류를 기대할 수 있는 인구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된 생활을 반드시 해당지역에서 제공할 필요는 없음. 재택근무는 주거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

참고문헌

- 多田忠意(2016)「移住促進政策の変遷と課題：鳥取県鳥取市の事例を踏まえて」『農林金融』, 18-35.
- 国土交通省(2021)「地方への移住・定住等の促進に向けた戦略的な支援や地域側コネクションハブの強化について」(<https://www.mlit.go.jp/common/001213277.pdf>).
- 島根県江津市(2021)移住支援情報サイト
(<https://www.kurashimanet.jp/lifestyle/shimane/municipality/goutsu.html>).
- 地方創生(2021)まち・ひと・しごと創生「長期ビジョン」「総合戦略」「基本方針」
(https://www.chisou.go.jp/sousei/mahishi_index.html).

나성인 통신원

(히로시마수도대학 인간환경학부 교수)
nasungin@shudo-u.ac.jp

샌프란시스코 시(City of San Francisco) “피트 스톱(Pit Stop)”

- 사회 취약계층의 환경 개선을 위한 24시간 원스톱 공공위생시설

배경

- 샌프란시스코 시(市) 노숙주택지원부(Department of Homelessness and Supportive Housing)에 따르면 매년 샌프란시스코 노숙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발표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8천여명을 돌파하였음¹⁾
- 특정 지역으로 노숙자의 텐트촌이 응집되고 인원수가 증가하면서, 노숙자들의 생활 쓰레기와 마약 투약으로 인한 주삿바늘 등 의료 폐기물이 급증하여 지역 간의 위생 불균형이 초래하고 있음
- 또한, COVID-19의 확산에 따라 노숙자의 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COVID-19로 인한 시(市) 공무원의 업무 처리 지연, 비영리단체 조직들의 경영악화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취약계층들이 더욱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임
 - * 샌프란시스코 일간지인 San Francisco Chronicle에서 전문가들과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기본적인 위생시설의 부재가 피부 발진과 같은 작은 피부병을 피부 괴사까지 만들 정도로 취약계층의 건강을 악화시킴²⁾
- 더 나아가, 위생시설의 부재는 단순히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과 샤워실을 독립적인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즉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시(市) 당국에 지속해서 요청하였음(San Francisco Chronicle에 따르면 대략 2만 7천여 건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함)³⁾

1) 출처: <https://sf.curbed.com/2019/5/17/18629080/san-francisco-homeless-population-count-numbers-2019-sf>

2) 출처: <https://www.sfchronicle.com/bayarea/philmatier/article/SF-s-public-toilets-a-big-relief-and-the-14879898.php>

3) 출처: <https://sanfrancisco.cbslocal.com/2019/08/02/san-francisco-curbs-waste-with-public-toilets-poop-patr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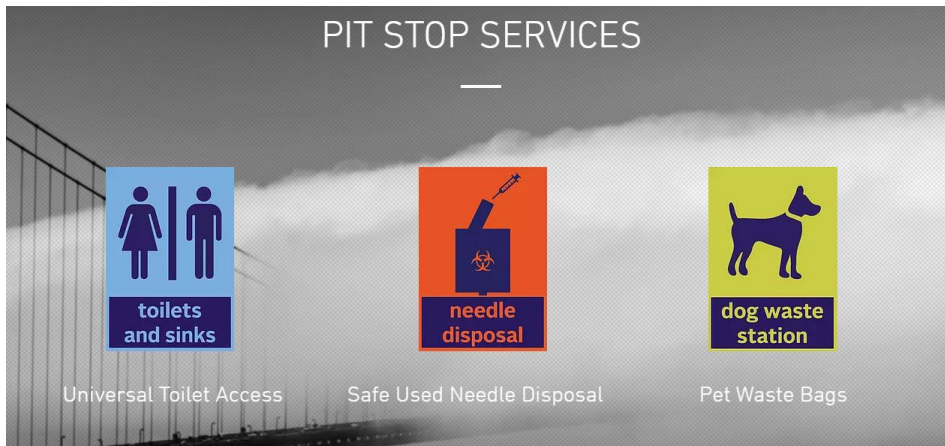
개요

- 2014년 7월, 샌프란시스코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동네 중 하나이자 노숙자 밀집 지역인 Tenderloin에 “Pit Stop(피트 스톱)”이라는 공공위생시설을 3곳에 열면서 파일럿 성향의 프로젝트를 시작함
 - 이 프로젝트는 한 학생무리에게 사람의 배설물을 투척하는 사건으로부터 의제화(Agenda)되었으며, 2014년 1월 시(市) 의회로부터 통과하여, 2014년 7월 평균 하나의 위생시설 당 \$200,000 정도의 예산으로 3곳이 설립되었음
 - 피트 스톱 프로젝트는 위생 관리를 위한 시(市) 당국의 아이디어가 아닌 비영리단체와 지역 시민의 참여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관심 속에 탄생한 아이디어로서, 미 대학인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 Ash Center에서는 훌륭한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의 한 아이디어로 평가하고 있음⁴⁾

피트 스톱 프로젝트 (“Pit Stop” Project)

- 이 프로젝트의 이름인 피트 스톱은 레이싱 경주에서 자동차가 잠시 점검과 급유를 받기 위해 정차하는 피트 스톱에서 그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사회 취약계층이 이러한 피트 스톱 위생시설을 이용하면서 자동차 점검과 같이 더 나은 내일을 그리도록 바라며 프로젝트 이름을 명명하였음
- 2014년 7월, 3곳에서 시작한 파일럿 성향(6개월)의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이동식 화장실로 시작하였지만, 점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발전하면서 2015년에는 일반 공중화장실 또한 이 프로젝트에 포함됐으며, 현재는 24시간 운영되는 피트 스톱을 포함하여 총 13동네에서 24곳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추가적으로 2곳은 공사 중에 있음)
 - 피트 스톱이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1) 화장실과 세면대(위생시설에는 샤워실도 있음), 2) 의료 폐기물 쓰레기통, 3) 반려동물 배설물 쓰레기통이 있음(하기 그림 1 참조)

4) 출처: <https://www.innovations.harvard.edu/san-francisco-pit-stop>



| 그림 1 | 피트 스톱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출처: 피트 스톱 공식 홈페이지 (San Francisco Public Work “Pit Stop”)

<https://sfpublicworks.wixsite.com/pitstop>

- 과거 공공화장실과 피트 스톱이 다른 점은 시(市) 당국에서 청소·관리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약물 오염에 빠진 노숙자들에게는 치료 상담을 제공하고, 관리가 부실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스태프가 배치되는 등 위생 시설과 치안 시설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음
- 또한, 화장실의 운영과 청소는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하여 진행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유지 및 보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Mark Farrell 샌프란시스코 당시 시장은 피트 스톱을 win-win-win solution이라고 평가하며, 도시 전체적으로는 깨끗한 인도(人道)와 위생을, 사회 취약계층에는 존엄성 회복과 위생적인 도움을,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고용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음
- * 더 나아가, 거주 지역에 따라 위생 환경과 정책 서비스의 수여가 달라지는 정책적 불평등을 해결하며, 현 바이든 정부의 모토인 환경적 지속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과 사회 정의(Social Justice)를 이루는 좋은 도구로 활용될 예정임



| 그림 2 | 피트 스톱 실제 사진

출처: 샌프란시스코 시(市) 공공사업 (San Francisco Public Works)

<https://sfpublicworks.wixsite.com/pitstop>

Pit Stops Locations of San Francisco's staffed public toilets



| 그림 3 | 2021년 피트 스톱 배치도 (*발간 원은 24시간 운영 시설)

출처: 샌프란시스코 시(市) 공공사업 (San Francisco Public Works)

<https://sfpublicworks.wixsite.com/pitstop>

프로젝트의 실행과 긍정적 결과

- 샌프란시스코 시(市) 공공 사업부에 따르면 프로젝트 시작 후, 매달 3천 2백여 건의 사용량을 보이며, 도로 위생에 관한 민원 신고가 일일 평균 24건에서 15건으로 줄었음⁵⁾

5) 출처: <https://sfpublicworks.org/project/successful-public-toilet-program-expands-south-market>

- 무엇보다도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된 정책 프로젝트인 만큼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 등지에 같은 이름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등 긍정적인 정책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21년부터 진행될 예산 계획에서 샌프란시스코의 피트 스톱 프로그램은 전년 대비 예산 배정이 2배 이상 증가하여 860만 달러(\$8.6 Million)를 승인받았음

프로젝트의 한계점

- 비록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일일 평균 민원 신고가 15건으로 줄었으나, 이 감소가 비평가들에게는 매우 적은 수치이며, 감소한 수치 또한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써 줄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또한, 화장실이 24시간 운영될 경우, 1회 사용 시 \$30(약 3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과연 이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는지, 혹은 더 나아가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프로젝트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주장함⁶⁾
- 하지만 이용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논하기 전에 사회 취약계층에게 정상적인 생활(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개별 공간에서 배변과 샤워를 한다는 것)을 제공해줌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함⁷⁾
- * 또한, 프로젝트가 진행된 기간이 아직 짧으며, 좀 더 많은 화장실을 배치할 경우 그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프로젝트의 미래

- 현 샌프란시스코 시장 London Breed의 계획에 따르면, 피트 스톱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위생시설과 더불어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세면대의 배치 등을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부터 우선하여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함⁸⁾
- 현재 24시간 운용되는 공공 화장실·샤워실이 3곳밖에 안 되는 만큼 공공위생시설을 더욱더 증가시키거나, 더욱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시간을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음

6) 출처: <https://www.businessinsider.com/san-francisco-public-pit-stop-toilets-cost-per-flush-2019-12>

7) 출처: https://www.sfexaminer.com/the-city/sf-public-works-director-commits-to-24-hour-public-bath-room-pilot-in-the-tenderloin/?fbclid=IwAR2vlnQypP5PkBYOi9rUFMpKn8XF65A1R-a0_dQJTxyGOM7DYmHcijlWUy8

8) 출처: <https://sfmayor.org/article/mayor-london-breed-announces-rollout-new-staffed-public-toilets-and-hand-washing-stations>

참고자료

- 샌프란시스코 시장 공보실 홈페이지: “<https://sfmayor.org/>”
- Chronicle Editorial Board. (2019, November 27). Editorial: Tackling San Francisco’s poop problem for good. San Francisco Chronicle. <https://www.sfchronicle.com/opinion/editorials/article/Editorial-Tackling-San-Francisco-s-poop-14867750.php>.

Eli Keunyoung Lee (이근영) 통신원

PhD Student,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Sol Price School of Public Polic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